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과영진 대회기획부위원장(가운데)과 김상표 시 설부위원장(오른쪽)이 20일 오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 “일부 설상경기장 조기 건립 내년 2월 테스트이벤트 개최”

### 평창 조직위 업무계획 발표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20일 ‘분산개최’ 논란을 일축하고, 올해부터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평창조직위는 이날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장 건설과 인프라 확충, 환경올림픽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등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과영진 대회기획부위원장은 “알파인스키와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스키 경기장 등을 조기에 건립해 내년 2월 테스트이벤트를 개최하

며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테스트 이벤트 등을 위해 경기운영 전문인력을 영입하는 등 내년까지 조직위 인원을 8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폐회식과 성화 봉송 계획도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개·폐회식 총감독은 5월 선정하고 부문별 감독단은 6월에 최종 선임할 예정이다. 또 대회 마스코트는 12월까지 완성하고 슬로건은 내년 3월까지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숙박시설도 올해까지 100%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창우기자

## 하수관거 업체 관계자에 항응 받은 공무원 실형

공사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항응을 제공받은 공무원과 감리원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최한돈 부장판사는 20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공사 편의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과 항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화천군정 공무원 이모(57)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500

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공사 감리원 장모(48)씨와 허모(45)씨 등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벌금 8,100만원과 8,6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이씨 등과 함께 항응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 김모(42)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책임감리원 김모(52)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신형철기자

## 【 2015.01.21(수) 건설경제 】

# 100억~200억 교량·터널공사도 실적 경쟁

조달청, 고난이도 공종 집행기준 개정 지방계약법 공사도 실적제한 적용 지방·중소사업 기회 축소 우려

앞으로 조달청이 집행하는 교량과 터널 등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건설공사도 실적경쟁 입찰방식이 적용된다. 또 지방계약법에 따르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도 실적경쟁 입찰 적용 근거가 마련됐다.

조달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을 개정, 앞으로 계약요청이 이뤄지는 공사를 대상으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그간 수요기관 요구에 의해 관행적으로 집행했던 고난이도 공종 공사에 대한 실적경쟁 입찰 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실적경쟁 입찰 대상공사 범위를 조정하는 등 집행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의 실적경쟁 입찰 처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PQ(입찰참가자적 사전심사대상) 공사에 대한 실적경쟁 입찰대상 및 평가기준이 신설됐다.

10개 고난이도 공종은 교량 및 공항, 함관, 지하철(도시철도), 터널, 쓰레기소각로, 폐수중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전시장) 등이다.

그동안 200억원 이상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PQ기준에 따른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했지만, 100억~

최근 3년간 조달청 고난이도 공종 공사입찰 집행실적



### 10개 고난이도 공종

교량, 공항, 함관, 지하철(도시철도), 터널, 쓰레기소각로, 폐수중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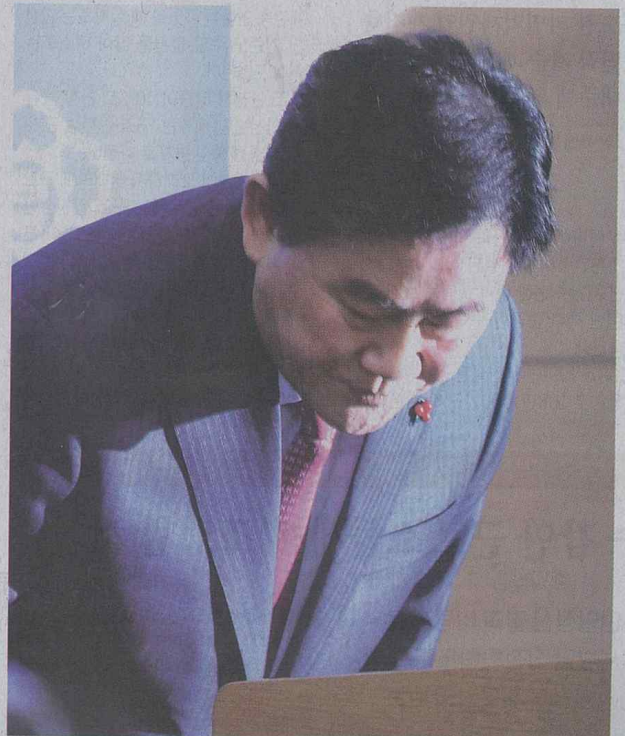
20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해 실적경쟁 방식이 적용되기도 했다.

지난 3년간 조달청의 고난이도 공종 공사입찰 집행실적은 모두 112건으로, 이 중 100억~200억원 미만은 전체의 30.4%인 34건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100억~200억원 미만 공사도 실적경쟁 입찰방식으로 집행될 전망이다.

개정 기준에는 이와 함께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의 실적제한 근거도 신설됐다. 종전까지는 국가계약법에 한정 실적제한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계약법 적용공사에도 조달청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업계는 이 같은 기준개정으로 지방 및 중소건설사들의 입찰 및 수주환경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100억~2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대개 PQ를 통한 3~5년 도록 또는 건축 실적평가 방식으로 집행돼 왔기 때문에 많게는 300~350개에 달하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으나,



### 연말정산 '폭탄' 논란... 진화 나선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 수, 노후 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

실적제한에 따라 앞으로는 입찰참가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100억~200억원 미만 공사에 실적경쟁이 도입되면 제한조건에 따라 다수의 업체가 입찰기회를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형사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어 중소기업들의 반발 등 과다제한 논란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